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5-10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9-15

한·러 관계의 평가 및 전망: 한·러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김덕주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19-15

한·러 관계의 평가 및 전망: 한·러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김덕주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정책연구시리즈 2019-15

**한·러 관계의 평가 및 전망:
한·러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발 행 2019년 12월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발 행 인 국립외교원장

주 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전 화 3497-7760 (代)

팩시밀리 571-1032

홈페이지 www.knda.go.kr
www.ifans.go.kr

디자인·인쇄 웃고문화사 (02-2267-3956)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비매품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9-15
한·러 관계의 평가 및 전망:
한·러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입안과 시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외 정책기조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연구시리즈』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목 차

요약	1
I. 들어가는 말	5
II. 한·러 관계의 진전	6
1. 한·소 수교 및 관계 발전	6
2. 한·러 관계로의 전환	13
3. 21세기 한·러 관계 진전	19
4.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25
5. 신북방정책	36
III. 평가	41
IV. 한·러 협력 방안 및 전망	55

요 약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등장과 함께 국제정세는 신데탕트의 시대로 돌입하였고 우리 정부는 ‘모스크바와 북경을 우회하여 평양으로 가는’ 북방외교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88 서울올림픽은 한·소 간 교류와 접촉이 대폭 증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199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역사적인 한·소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같은 해 9월 양국이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한·소 양국은 명실공히 인접국으로서 선린·협력관계로 진입하였다. 이듬해 말 러시아가 구(舊)소련을 계승하게 됨에 따라 한·소 관계는 자연스럽게 한·러 관계로 전환되었고, 1992년 엘친(Boris Yeltsin) 대통령 방한 시에는 ‘한·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엘친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가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하였다. 1998년 양국 외교관 상호 출국 문제 등으로 한·러 관계는 잠시나마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양국 간 동반자 관계 발전 및 호혜적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러시아는 남북한 간 균형된 대(對)한반도 외교를 전개하였으나 남북한 간 접촉과 건설적 협력 증진을 계속 지지하였고,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2002년에는 한·러 수교 10주년을 기념하고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러 친선특급’ 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었다. 2004년 러시아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러 수호통상조약 체결 120주년 및 한인의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의 오래된 역사적 전통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가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하였다.

2008년 한국과 러시아에서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동년 9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금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2010년에는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연내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고, 양측은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일시 위축되었던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상호 확대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3년 한·러 양국은 양국 신정부 수립 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을 실현해나갔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였는바, 러시아는 이러한 정책의 필수 불가결한 협력국으로 인식되었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극동 개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9개 다리’ 전략 등 극동 개발과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신북방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러 정상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 Partnership)이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어 어려운 국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질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듬해인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으로 방문하였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구적 평화 및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수교 30주년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한·러 양국은 85여 년간의 외교 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지난 30년간 ‘협력과 갈등’, ‘접근과 정체’의 이중주를 경험하면서 냉전적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러 관계가 현실적으로 동맹으로까지는 발전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은 최고의 관계 구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

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성격 규정은 아직까지 '수사(rhetoric)'에 불과하며, 양국 관계가 그 잠재력과 상호 보완성에 비추어 그 발전의 속도와 질적 수준의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즉 한·러 간 상호 협력이 제공해주는 공유이익이 점차 다양해지고 확대되어감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략적 협력 방안에 관한 무수한 논의와 제안들이 있었지만, 현실에서 한국은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서 잘 활용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반면 한·러 관계 정상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 사이의 교역과 투자 등 경제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양국 간 교역 품목도 점점 다양해졌으나, 한국이 러시아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재를 수출하고 러시아가 한국에 천연자원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러 간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인접국이자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궁극적인 통일에 주요한 역할을 할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구도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간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러 간 정치분야 관계진전을 바탕으로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러시아와 호혜적인 실질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므로써, 우리 국민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우리의 경제적 번영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대(對)한 전략적 입장과 목표는 우리의 그것보다 다차원적이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것이 사실이며,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대외정책 목표를 단순화하기는 쉽지 않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중·일과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러시아는 역내 안보 현안의 당사자로서 소외·배제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는 측면에서 러시아 고유의 특성을 시현하고 있다.

한편 양국의 실질협력을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필요가 서로 부합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대(對)러시아 수출구조가 중간재 위주로 전환되고 있고 극동러시아 투자 동기 중에서 제조업분야가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 지역 내 한·러 산

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협력 거버넌스 경험이 취약한 동 지역에서는 소(小)다자주의적 접근을 추진함으로써 한·러 양국 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민감성과 경제적 비대칭성을 자연스럽게 완화할 수 있으며 양자간 교류에서 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가장 처음 제시되었던 소다자주의 협력의 모델이 소위 ‘남·북·러 3각 협력’이라 할 수 있다.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러시아 측의 협력 유도, 통일 한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 확보, 유라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 북극해 시대 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향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협력관계 추이,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남·북·러 협력 유망분야 발굴과 사전 조사 및 관련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한·일·러 3국의 대외정책과 각국 지도자의 능동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소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3국 협력의 토대 구축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일본의 대(對)러 경제협력 정책의 접점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간 최우선 정책 순위 대상국은 아닐지라도, 나름의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접근 대상이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인 관계 발전 도모가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 간 협력관계를 일관성 있게 지속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원동력은 양국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국의 더욱 적극적인 공공외교 전개가 추진되어야 한다.

I. 들어가는 말

구한말 아관파천 등 질곡 진 역사에 등장하였던 러시아! 냉전이라는 이유로 85년을 넘게 서로를 외면하였던 두 나라, 한국과 소련!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북방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적 지위가 새롭게 정의되었으며, 구(舊)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외교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였다. 특히 구(舊)공산권 국가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과의 관계개선 및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우리는 모스크바(Moscow)를 돌아 평양을 가고자 했고, 그들은 우리를 일본의 대체재로 생각했다고 하면 너무 단순한 비유일까?!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각자 대내외적으로 처리하고 대응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고, 양국 관계 발전이라는 화두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를 지속했다면 너무 안이한 분석일까?!

우리에게 러시아는 어떠한 존재일까? 여전히 핵을 위시한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러시아는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 중요한 행위자이고, 미래 통일 한국이 국경을 맞대어야 하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양국 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나 중요도에서 보았을 때 내재적 비대칭성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사실 버거운 존재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사라도 갈 수 있지만, 국가에는 그러한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은 선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새로운 이정표를 작성한 지 어느덧 30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양국 관계의 진전을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우선 II장에서는 1990년 관계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의 진전 및 발전을 돌이켜본다. 양국 관계의 진전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정부의 변천에 따른 양국 정상 간 회동을 통시적 입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지난 30년간 양국 협력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양국 발전의 공유이익과 한계를 찾아본다. 양국 관계 진전 단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한·러 관계 발전을 제한했던 요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협력 증진 방안 모색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에 대한 현황을 평가하고, 지정학적, 지경학적 측면에서 우선 협력 가능 지역인 극동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및 우리의 입장을 평가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한·러 관계의 미래를 전망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외교적 가치를 비교하고, 특히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협력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적 실행 계획을 제안한다. 또한 동 계획의 이행 방법으로서 소다자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며 남·북·러 협력을 비롯한 가능한 모델을 예측해 본다. 끝으로 향후 한·러 관계 발전의 기본적이며 원론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환기하고자 한다.

Ⅱ. 한·러 관계의 진전

1. 한·소 수교 및 관계 발전

1945년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1948년 우리의 정부 수립과 6·25 사변을 거쳐 1960년대에 이르는 동안 소련은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한·소 관계는 없다시피 하였다.¹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미·중 화해와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

¹ 본 장의 내용은 외교부 발간 외교백서 및 관련 문건을 발췌, 재정리하였다.

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군사개입 축소 등으로 한반도 주변 대외여건이 변화하고, 우리의 경제력 신장에 힘입어 국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對)공산권 문호 개방을 모색하게 되었다.²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당시 공산권 국가의 리더 격인 대(對)소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후 한·소 간에는 학술·언론·경제·체육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의 실적이 꾸준히 축적되었으며, 정부 관리들도 국제회의 참가 목적으로 내왕하는 사례가 생겨났다.³

1980년대 들어서서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가 대(對)소 강경입장을 취함에 따라 동·서 간 분위기가 경직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가 정체됨에 따라 한·소 관계도 정체 상태에 진입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1983년 9월 소련 전투기에 의한 KAL기 격추 사건은 한·소 관계를 급냉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등장은 한·소 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었는데, 동인은 ‘신사고’에 따른 외교정책을 주창하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모든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표방하였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을 통하여 적극적인 아시아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이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에도 보다 전진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우선 소련은 한반도의 정체 불안이 자신의 개혁정책 및 대(對)아시아 정책 추진에 주요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한반도 정체 안정을 추구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대화 진전과 긴장완화를 지지하였다. 또한 소련은 한반도에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가 실재한다는 현실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의 배경에는 정치적·전략적 고려도 있을 것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신흥공업국으로서 한국의 능력을 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소련은 북한

2. 이의 구체적 표현이 1973년에 발표된 6·23 선언인 바,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문호개방을 천명한 것이다.

3. 1978년 9월 우리의 보사부 장관이 세계보건기구(WHO) 관련 회의 참석차 소련에 입국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과의 기존 관계를 가급적 손상치 않으려는 입장도 유지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신사고’의 적용에 일정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합리적 충분성’에 기초한 신사고 외교정책을 추구하여 미·소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중·소 간에도 관계 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 이래 전 세계는 신데탕트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 세계적인 탈냉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냉전체제의 마지막 남은 유산으로서 긴장상태가 지속되었다. 국제정세 발전에 역행하는 이와 같은 소모적 대립의 지속은 남북한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한민족 전체의 역량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1988년 2월 제6공화국은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와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한반도 안보환경을 개선시켜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할 목적하에 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7월에는 ‘민족자존과 통일변영에 관한 특별선언(7·7 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이는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왔으며, 북한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통일외교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7·7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스크바와 북경을 우회하여 평양으로 가는’ 북방외교를 우리의 주도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북방외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궁극적인 통일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련, 중국, 동구제국 등 공산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이는 중·소를 비롯한 북방 사회주의제국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추구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일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안정과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동시에 우리 우방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데도 그 목표가 있다. 아울러 공산제국과의 관계 발전으로 종래 서방국가만을 대상으

로 하였던 우리 외교를 전방위 외교로 전환하는 것도 북방외교가 추구하는 바이다. 또한 공산제국과의 통상·경제 등 제반 실질교류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와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경제적 실익 증대 기회를 늘리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평화와 화해 증진 및 한반도 문제 해결에 소련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對)소 관계개선을 북방외교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우리 정부는 소련이 아·태 지역 국가와의 관계개선, 협력 증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소련이 아국과의 관계 정상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자제 및 북한의 모험주의 억제, 북한의 개혁·개방 권유 등으로 집약되는 ‘신사고’를 대(對)한반도 정책에도 적극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개최된 88 서울올림픽은 한·소 간 교류와 접촉이 대폭 증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련의 올림픽 참가를 기회로 양국 간의 요인 상호 방문, 소련 영사단의 체류, 항공기의 기착 등 관계 발전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었다.

이후 양국 관계는 소련의 개혁·개방의 급진전에 따른 동·서 화해 분위기가속화와 소련의 현실적인 대외정책, 양국 간 관계 확대의 실질적 유용성에 대한 한·소 양측의 동일한 인식 등에 힘입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보였다. 예컨대, 1989년 4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소련 상의가 최초로 상호 상주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여 양국 간 무역 증진을 위해 노력을 경주기로 한 것이나, 소련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우수한 국제관계 연구소의 고위연구원들과 우리의 학자들이 교류하여 양국 관계 발전에 전향적인 구상을 제시한 것 그리고 우리의 국회의원이나 유력 경제인들이 소련을 방문하여 한·소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두드러진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진전의 바탕 위에서 양국 외무부 대표들은 1989년 11월 상호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영사처를 교환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사실상의 영사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에 이르렀다.⁴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 정부는 1990년 2월에 개설된 주 모스크바 대한

민국 영사처를 정부 간 상주대화 채널로 하여 공적접촉을 확대하고 고위인사 간 접촉을 증대하여 양국 공식관계의 수립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비정치분야의 경협·통상·사회·학술·문화 등 교류를 심화시켜 상호 의존도와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제반 교류가 공식관계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였다.

마침내 비록 제3국 땅이었지만 199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역사적인 한·소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사실상 수교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9월 뉴욕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소 수교가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한국의 제6공화국 정부가 북방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소련 또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시한 ‘신사고’에 입각한 새로운 아·태 정책에 의거 이에 호응한 결과 이제 한·소 양국은 명실공히 인접국으로서 선린·협력관계로 진입하였다.

한·소 간 정치분야 관계진전에 있어 우리 정부는 인접국이자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궁극적인 통일에 주요한 역할을 할 소련과 오랜 기간 외교적인 단절을 겪어 왔음을 주목하고, 소련에 개혁 지향적이고 전향적인 대외관계 시각을 가진 지도부가 존재할 때 신속히 관계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겠다는 입장으로 대처하여 왔다. 그리고 소련과 제반협의를 해나감에 있어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문제, 북한으로 하여금 현실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문제,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문제, 한·소 양자간 호혜적인 실질협력 분야를 개방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소련 측과 적극 협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북한의 대(對)남 도발 가능성 억지, 소·북한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 남북 대화 진전, 북한의 대남군사정책변화,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유엔(UN: United Nations) 가입 문제, 양자간 협력 강화 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소련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당연히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소 양자간 호혜적

4. 북방외교의 성과를 내외에 극적으로 과시한 것은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아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와 정상외교를 펼침으로써 북방외교 추진은 물론, 동·서 화해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선양하였다.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정상회담에 임하였다. 1990년 12월 14일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상 최초 소련 방문으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소 정상은 양국 관계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광범위한 국제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전반적인 협력의 발전에 대하여 공동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민의 염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관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선린, 신뢰, 협력의 정신으로 제반관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 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은 한·소 양국 관계가 지향하여야 할 장전(章典)과 같은 것으로서 양국 관계의 법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향유하였다. 나아가 양측은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세방지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경제관계 4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1년 4월 고르바초프 대통령 방한은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 방소시 초청에 따른 것이나, 소련 국가원수의 최초 한반도 방문이라는 점에서 소련의 현실적인 대(對)한반도 정책을 확고히 하고, 한·소 관계를 심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계기가 되었다.⁵ 동 정상회담 결과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안정되고 남북대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등 문제에 있어 북한의 현실적인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지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었다. 즉 우리의 유엔 가입에 대한 유엔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지지가 분명해지고 국제적 합의가 확실시됨에 따라 결국 1991년 5월 북한은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돌연 유엔 가입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북방외교의 성과로서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이 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긴

⁵ 동 정상회담 결과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안정되고, 남북대화, IAEA 등 문제에 있어 북한의 현실적인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지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장완화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한·소 양국이 지리적 인접성이나 산업구조, 자원분포 등 측면에서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다대하다고 보고, 무역, 합작투자, 자원개발, 과학기술교류, 교통·통신, 수산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소 간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수교 교섭 전후부터 실무진 간에 논의되어 왔으며, 1989년 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차 한·소 경제각료회담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되었다. 이 결과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 시에 한·소 양측은 앞서 언급한 무역협정 등 4개 경제 관련 협정을 서명하여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1년 1월 개최된 제2차 한·소 경제각료회담에서 양측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의 성공이 국제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소련의 경제난 타개를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대(對)소 경제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에서 1991~1993년 중 총 30억 불의 차관을 소련 측에 제공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20억 불의 우리 소비재와 자본재 매입용 차관과 10억 불의 은행 차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금리를 적용하는 상업성의 차관이였다. 이 결과 1991년에는 소련이 급히 필요로 하는 약 4억 7천만 불에 달하는 국산 소비재를 동 차관으로 수출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10억 불의 은행 차관을 제공하였다.

북방외교의 축으로서 우리 정부가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온 한·소 관계는 1991년 8월 보수 세력에 의한 쿠데타 발생으로 일시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소련 국민들의 저항으로 쿠데타 기도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정상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가속화된 소련 권력층의 약화와 각 공화국의 연방 탈퇴 움직임은 마침내 1991년 12월 소연방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창설로 이어져, 한·소 관계는 새로운 한·러 관계로의 재정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 한·러 관계로의 전환

1991년 12월 국제법적으로는 러시아가 구소연방을 계승하게 됨에 따라 한·소 간 발전되어 온 협력관계는 자연 한·러시아 간의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신생 러시아는 아직 가격 자유화, 재산의 사유화 정책 등 경제개혁의 추진으로 대외관계에 있어 당분간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곤란하였으나, 국력과 지정학적 여건상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계속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웠다. 특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등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오히려 구소련 때 보다 더 유리한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러시아는 1992년 1월 로가초프(Igor Rogachev) 대사를 옹친 대통령의 특사로서 북한을 방문케 하여 소련이 해체된 이후의 러시아·북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미 한·소 수교와 양국 관계 발전으로 소·북한 관계는 소원해져 왔으나 러시아가 새로이 등장함에 따라 러시아·북한 양국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관계를 설정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러시아 측은 북한과의 관계를 소·북한 간의 이념적 특수 관계를 배제한 국가 대 국가 간 일반적인 관계로 보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 있어서 호혜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여 과거 소련이 북한에 해왔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군사적 지원이나 경제원조를 계속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소·북한 간 체결된 상호원조 조약과 관련하여서는 1961년 조약 체결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는바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러 양국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1992년 11월 옹친 대통령의 방한 시에는 ‘한·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최초의 아시아 지역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러시아가 탈냉전 시대의 동북

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안보 및 실질 협력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한·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직접 서명하면서 동 조약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시장경제원칙 등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 협력국으로서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러 양국의 공동의지를 반영하는 법적 기초로서 양 국민 간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며 모든 분야에서 실질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아·태 지역 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 간 협력 증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에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한 상호 핵사찰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옐친 대통령은 1983년 9월에 발생한 비극적인 KAL기 사건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동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동 자료를 한국 측에 인도키로 하였다. 또한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가 스탈린(Iosif Stalin) 치하에서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법적지위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재러시아 한인들에 대한 법적보호와 적절한 대우 시행을 분명히 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무역,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이 수교 이후 크게 증대하였으며,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나흐카(Nakhodka) 자유경제지역에 한국기업공단 설치에 관해 논의하였고, 러시아 측의 관계 법령 조기 정비, 사회간접자본 개발 및 투자유인제도의 도입 등이 동 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임을 확인하면서 양국 정부가 한국기업공단 설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시베리아, 극동 및 사할린 등 러시아 영토 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 및 기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새로운 협력분야의 개발과 과학, 기술분야 정보와 전문

가의 교환 필요성에도 합의하였다. 더불어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의 민간기업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한국기업들로 하여금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화 전환을 지원토록 권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옐친 대통령은 러·북한 상호원조조약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과거와 같이 특수한 이념적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하였고 한국전 관계 문서의 전달을 약속하는 등 불행했던 시대의 잔재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소연방 해체 후 새롭게 등장한 러시아는 국경을 접한 한반도 주변 4강의 하나로서 우리와 정치·안보 및 경제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1993년 중 우리 외교의 최대 현안이었던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나라 및 서방 각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외무부 성명을 발표하였고, 대(對)북한 원자력 협력을 중단하고 북한에서 활동 중이던 러시아 핵 과학자들을 철수시킨 바 있다. 한·러 양국 간 협력관계는 1993년 중 군사분야에까지 확대되어 8월 러시아 해군함정이 최초로 부산항을 방문하였으며 9월에는 우리 해군 함정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방문하였다. 또한 9월에는 우리 합참의장이 러시아를 방문, 양국 간 군사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옐친 대통령 방한 시 표출되었던 불행했던 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 자세는 이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시현되었다. 러시아는 1993년도에 개정된 초·중·고등학생용 교과서에 6·25 남침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1993년 6월 외무장관의 러시아 방문 시에는 외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한국전 관련문서 개요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러시아 측은 러·북한 상호원조조약이 북한이 도발하지 않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도발 여부도 러시아가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통상관계에서도 양국 간 경화결재 방식을 도입하였고 원유 등 러시아산 원자재에 대한 특별 우대 가격을

폐지하였다.

대한민국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정세 전반과 양국 관계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양국 대통령은 한·러 양국 간의 관계가 1992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착실히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관계가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존중 및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아·태 지역의 역동적인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아·태 지역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양자 및 다자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안정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들 간의 안보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북아 지역 안보대화 문제에 관하여 한·러 양국 간에 협의 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 정세 토의과정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평화구축 및 안보와 안정을 위하여 남북대화의 지속이 필요 불가결함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통일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는 데 공감하였고,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가 관련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우리 측은 옐친 대통령의 주도에 의해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대한항공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문서가 공개된 데 이어 한국전쟁의 진상을 밝히는 문서 사본을 한국 측에 인도함으로써 불행했던 양국 간의 과거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국 정부는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상 간의 대화를 포함하여 총리, 의회지도자, 정부 각료 등의 여러 수준에서의 정치

대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문화, 학술,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를 적극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고,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크렘린 간에 직통전화(Hot Line)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후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 해결 추진, 4자 회담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러시아의 건설적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그동안 한·러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오던 경협차관 상환 문제와 관련하여 1995년 7월 한·러 양국 간에 그 상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경제분야에서의 관계 발전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러시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남북한 통일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응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은 지속되었다. 러시아는 우리 측이 1994년 5월 제의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를 통한 한반도 평화 논의 과정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민간 주도로 진행 중인 동북아 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등 다자안보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군사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꾸준히 증진되어 양국은 국방부 군 고위인사의 정례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심화하였고, 1997년 국방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군사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 군수협력 협정 서명과 군사비밀 보호 협정 체결 협의 등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한편 대(對)러시아 경협차관 상환의 일환으로 전차, 대전차 유도탄 등 러시아 방산물자가 도입되었으며, 해군함정의 교환 방문도 양국군 간 교류의 일환으로 지속되었다.

1998년 들어 한·러 관계는 7월 양국 외교관 상호출국 문제로 잠시나마 경색되었으나, 9월 유엔 총회 계기 한·러 외무장관 회담에서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 동반자 관계 발전 및 호혜적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이 논

의되었으며,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김대중 대통령은 옐친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1999년 5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양국 간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양측은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 강화가 21세기를 앞두고 양국 간의 다각적인 상호교류에서 지도적 개념이 된다는 데 합의하면서 이러한 접근이 양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안정, 번영을 위해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대화 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역내 정세의 가측성을 제고하고 지역 안보협력 문제를 토의하는데 있어 유용하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하였고, 이러한 인식하에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참가하는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대화 구축을 위한 제안을 환영하였다. 또한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시아 불안정의 잠재적 근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 역내 안정을 위하여 긴요함을 이해하였고, 한반도 문제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유의하였다. 러시아 측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하게 할 남북한 간 접촉과 생산적 대화를 촉진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한국 측은 러시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러 정상은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크고 무역 및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다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양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부진했던 양국의 교역관계와 한국의 대(對)러시아 투자관계를 확대·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무역과 투자를 재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을 같이하고, 양국 간 무역 및 경제협력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특히 나훗카 자유무역지대 한·러 공업단지(Korea-Russia Industrial Complex)가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유용한 사업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으며,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와 광물자원, 과학과 기술 및 공업분야에서의 양자간 협력 확대가 경제관계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지난 수년간 국가와 정부, 의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정치접촉 체제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이러한 대화 경로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하에 한국과 러시아 국민 간 상호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문화와 교육, 과학, 정보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토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제1차 한·러 포럼이 모스크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모스크바 대학에서의 연설을 통해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한·러 관계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21세기 한·러 관계 진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며 시행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47세인 푸틴(Vladimir Putin)의 당선은 정치권 세대교체의 촉진 및 지난 10여년 간 지속되어 온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과도기를 종식시키면서 러시아가 '정상 국가(normal state)'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0년 5월 출범한 푸틴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강력한 국가권력의 확립과 경제 재건', 대외적으로는 '강대국의 지위 회복'을 국가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⁶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옐친 정권 후반기부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였는바, 2000년 2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에 맞추어 자동군사

⁶ 고재남, "러시아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한반도",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과제, 42쪽

개입 조항을 포함하였던 조·소 우호조약이 ‘북·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으로의 갱신(更新)이 이루어졌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2000년 7월 평양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구소련과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서는 최초의 북한 방문이었으며, 푸틴 대통령의 북한 도착에 맞추어 신조약이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됨으로써 푸틴 방북에 대한 러시아 국내의 支持가 표출되었다. 푸틴 대통령이 서울보다 평양을 먼저 방문한 것은 향후 남북한 간 균형된 대(對)한반도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한 김정일과의 논의 결과를 G8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푸틴의 방북에서 러·북 간 우호 협력 증진, 군사 및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합의,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National Missile Defense)/전역(戰域)미사일 방위(TMD: theater missile defense) 구축 저지에 대한 공조 확인 등 러·북 관계의 복원 및 개선을 위한 기반은 조성하였으나, 양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 조건부 포기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이를 G8 정상회담에서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G8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성공적인 등장을 하였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발언권을 강화하였다.⁷

푸틴 신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노력을 지지하고 통일 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2000년 7월 북한 방문 시 러·북 간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성과와 그 결과 채택된 남북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지속 개선되어 나가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기본적 입장은 이듬해인 2001년 2월 푸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할 때에도 견지되었다. 즉 한·러 정상은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조치가 한반도에서의

7. 김덕주, “푸틴 방북의 평가와 러·북 관계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5쪽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물론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을 재확인하였고, 양국 정상은 이와 같은 진전을 환영하고 이러한 방향으로의 진전이 계속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 측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한 간 접촉과 건설적 협력 증진을 계속 지지해 나가고자 하는 용의와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양국 정상은 남북한 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이 에너지 및 자원분야사업 및 한반도 종단철도(TKR: Trans-Korean Railway)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Siberian Railroad)의 연결사업과 같이 러시아와 대한민국 및 여타 국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을 이행하는데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러한 사안들에 관한 협의 기회의 마련을 포함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전략적 안정 유지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 및 궁극적인 철폐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였고,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고 한반도에서의 미사일의 개발, 수출 및 배치에 관한 문제가 관련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경제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양측은 무역과 투자, 에너지와 자원,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정보기술과 통신, 어업, 해운, 항공, 철도, 환경, 관광 및 지역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양측은 2001년 2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동 공동위에서의 결정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외교 관계의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중 개최된 다양한 행사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면서 문화, 예술, 과학, 교육, 법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교

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제3차 한·러 경제공동위, 제4차 한·러 무역공동위, 제2차 한·러 산업협력위 그리고 제2차 한·러 중소기업실무회의 등이 개최되어 양국 간 에너지 자원 개발, 철도 운송분야 협력, 과학 기술 협력, 중소기업 간 교류 및 교역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그동안 양국 간 협력관계가 중앙정부 간 협력 채널을 위주로 발전되어온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양국 간 실질협력을 양국의 특성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1년 2월 제3차 경제공동위 시 한·러 극동 및 시베리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상호 협력관계를 심화시켜왔던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여러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다차원에서 폭넓은 분야의 실질협력 토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양국 관계의 초점이 정부분야에서 TKR-TSR 연결사업을 필두로 한 실질협력 분야로 옮겨졌으며, 특히 2001년 12월 제1차 한·러 교통협력위원회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한·러 교통협력위 운영 약정 및 한·러 철도협력약정이 체결되어 본격적인 양국 간 철도협력 시대를 열어나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듬해인 2002년 12월에는 제2차 한·러 교통협력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향후 남북 간 경의선 철도연결이 완료된 이후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 운행 문제를 논의하여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 문제를 협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양국 간 교류 증진과 공공외교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러시아 차세대 지도자 초청 사업’과 ‘한·러 21세기 동반자 교류협력사업’이 착수되어 자리를 잡기 시작함에 따라 러시아 내 주요 인사들의 방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⁸ 또한 2002년에는 한·러 수교 10주년을 기념하고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러 친선특급’ 사업을 시행하였다. 러시아에 대

8. 대표적인 방한 인사로는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 지역 대통령 대표, 야신 국립경제대학교 교문, 코조킨 이즈베스티야 사장, 루킨 러시아 하원 부의장, 야코블레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이그나텐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사 사장, 클레바노프 산업과학기술부 장관, 아브라미안 한·러 친선협회 부회장 등을 꼽을 수 있다.

한 우리 국민의 이해 폭을 확대하고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서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을 통해 7월 14일~8월 1일간 우리나라의 정계, 재계, 관계, 학계, 언론계, 대학생 등 약 350명의 인원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러시아 7개 도시(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여 지역설명회, 상품전시회, 문화공연, 젊은이 축제, 복지시설 방문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특히 마지막 기착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고이범진 초대 주러시아 상주 공사 추모 행사’를 가져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2003년 9월에는 한·러 재무장관이 대(對)러시아 경험차관 채무 재조정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러시아는 향후 23년간 약 15.8억 달러를 분할 상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대러시아 경험차관 상환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우리 금융기관은 러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계기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TKR-TSR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러 3국 철도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3국 간 철도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5년 만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1994년 양국이 선언한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며 한 차원 더 높은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러 수호통상조약 체결 120주년 및 한인의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의 오래된 역사적 전통을 재확인하면서 최근 수년간 양국이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양국 관계가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하였다. 한·러 정상은 향후 정상 간의 정례 회동과 더불어 정부, 의회, 공공 및 민간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증가하는 영사업무 수요를 고려하고 아울러 양

국 간의 상호이해,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하여 상호주의 차원에서 총영사관들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산업, 교통, 해양과학기술, 우주산업, 광물자원 개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수산 및 지역협력 등 주요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장기적 토대 위에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양측은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우선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한·러 경제 동반자 관계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우주기술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이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한국형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개발 및 2007년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 양성을 위한 공동 유인 우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유전, 가스전 개발과 석유, 가스 운송 및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규모 경제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양측은 대한민국에 대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급에 관한 장기적 사업을 준비하고 실현해 나갈에 있어 양국 유관기관과 기업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가까운 장래에 가스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양국 유관 기관 간의 에너지 전략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양국 정상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는 데 공감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화해 및 협력 증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내 안정, 안보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러시아 측의 건설적 노력을 평가하였다.

다음 해인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다시금 푸틴 대통령과 회동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한 분단국 정상으로서 단절과 분열을 넘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확보

하고,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13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는바, 동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 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4.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은 한국과 러시아에서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해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동년 9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동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최근 수년간 한·러 관계가 다방면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금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외교·안보분야에서 양측은 새로운 협의 채널로서 양국 외교 당국 간 제 1차 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한·러 포럼 등 기존의 양자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문화, 학술, 청소년,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문화 및 각종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여, 양국 수교 20주년을 중대한 행사로 기념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사증 발급 간소화 등 관련 법적 기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 통상 협력 분야에서는 양국 간 협력 잠재력 실현을 위해 교역구조 개선, 러시아산 기계·기술장비 및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물량 확대, 경제·통상 협력의 질과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고 무역 자유화를 위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러 투자 협력이 양국 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그 잠재력이 크다는 점

에 인식을 공유하고 가공, 첨단기술, 에너지, 천연자원 개발분야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러시아 측은 연방특별프로그램인 '1996~2005년 간 및 2013년까지의 극동·시베리아 경제·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의사를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보다 심도 있는 경제협력을 위해 민간 부문 간 대화를 강화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고, 이와 관련 지방 차원의 대화를 포함하여 한·러 비즈니스 대화를 확대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양국 민간 부문 간 내실 있는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한편 한·러 정상은 가장 중요한 양국 경제협력 대상 중 하나인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와 한국 및 제3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서캄차카(West Kamchatka) 해상광구 등 러시아연방 내 해상광구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상호이익이 됨을 이해하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 국영가스회사 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측은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및 연구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2008년 봄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러시아 우주선에 탑승하여 우주비행에 성공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을 포함하여 양국 간 우주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국제정세를 면밀히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APEC 등 지역기구의 틀 내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측은 6자회담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인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였으며, 러시아 측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

의 노력을 러시아 측에 설명하였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및 협력을 지지함을 확인하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2000년 초반부터 논의되어 온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등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이 국제 교통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사업이 극동·시베리아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국이 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기간 중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철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등 '3대 신실크로드' 비전을 천명하기도 하였다.⁹

2008년 10월에는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이 개설되어 러시아 지방정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고,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신실크로드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듬해에는 러시아와 에너지·자원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서캄차카 등 유·가스전 공동개발, 전력 및 원자력 산업 등 총 8개 분야 20개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한·러 에너지 협력 액션플랜'이 서명되었고, 처음으로 사할린-2 LNG(Liquefied Natural Gas)가 연 150만 톤씩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에너지 도입 다변화에 기여하였다.

2009년 9월에는 하바롭스크 주정부가 주관하는 제4차 극동국제경제 포럼과 제5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가 연계 개최되어 양국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극동 지역 지방정부와 우리 지자체·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2010년 한·

9. 철의 실크로드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여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철로의 대동맥 건설을, 에너지 실크로드는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 및 인프라 건설 경험을 결합하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를, 녹색 실크로드는 연해주의 광활한 농림지에 우리의 영농기술과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접목하여 태평양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녹색벨트 구축을 의미한다.

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문화·인적 교류도 지속 확대되었다. 한·러 문화부 장관 회담을 계기로 '2009~2011 한·러 문화교류계획서'가 서명되고,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3개 대학 내 러시아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양국 간 문화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연내 상호 방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강화하고 2008년 격상된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9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야로슬라블(Yaroslavl) 국제 정책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하여 우리의 산업화와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소개하였고, 11월에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국민 방한하여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러 관계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보편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그리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의 일치 또는 유사성에 근거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에서 개최된 다양한 행사들이 상호이해 제고와 사회적 네트워크 기반 강화, 새로운 상호 교류채널 구축에 기여하였고 양국 정상의 주도로 출범한 고려대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간 '한·러대화'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인적교류 확대와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개선 및 비자 간소화에 관한 합의 도출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고, 이와 관련, 양측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일시 위축되었던 양국 간 교역이 회복되고 있고 한국기업들의 대(對)러시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투자가 상호 확대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폭넓은 과제와 인프라, 농업, 어업 및 수산가공, 교통 및 물류 개발을 위한 한·러 공동 프로젝트 연계 등 역내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 한·러 간 가스관 건설 및 송전망 부설 사업이 양국 간 교류 증진 및 동북아 국가 간 역내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편 양 정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이 증가함에 따라 역내 모든 국가가 지역 안보 및 안정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현존하는 역내 핵 문제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포괄적이고 완전하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실무그룹을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2010년에는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이 준공되고 모스크바의 롯데 호텔이 문을 여는 등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투자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현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한·러 경제현대화 공동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11월에는 우리 지식경제부와 러시아 경제개발부 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러시아와 경제현대화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 일류 상품전, 한국유물 전시회, 발레 오페라 합동 공연 등 한국과 러시아에서 80여 개의 다양한 문화·학술 교류 행사가 개최되어 양 국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0년 11월에는 민간주도의 포괄적 대화채널인 ‘한·러 대화’가 출범함으로써 향후 양국의 산·학·민·관을 아우르는 협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 대화’의 폐막식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하여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직접 청취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실무 방문하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다시금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러 대화에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참석하여 한·러 대화가 양국 관계를 이끌어가는 포괄적 포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러시아 방문

을 통해 격상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정치·안보, 경제·통상,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갔다.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향후 한·러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푸틴 신정부하에서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진출 정책이 적극 추진되는 환경에서 양 정상은 주요 전략사업인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러 국방 차관급 대화와 대통령실 안보기관 간 협의 채널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양국 간 외교·안보분야 협력 네트워크가 크게 강화되었고, 상호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해 일반인 사증면제협정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러시아 내 친(親)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설조직으로서 ‘러·한 소사이터티’ 추진 등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현지 밀착형 공공외교 강화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공공외교 강화 노력들은 문화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및 호감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제, 정치, 안보분야에서 한·러 양국 간 협력이 가시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3년 한·러 양국은 양국 신정부 수립 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을 실현해나갔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였는바, 러시아는 이러한 정책의 필수 불가결한 협력국으로 인식되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대립과 갈등의 동북아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다자대화 프로세스이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 관계임에도 안보 및 정치분야에서는 역사, 영토 이슈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

스(Asian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은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룰 다자협력체제 부재로 역사·영토 문제 등 역내 국가 간 갈등은 물론 환경, 에너지 문제 등 새로운 초국가적 공동위협 요인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같은 역내 신뢰 구축을 위한 다자간 노력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점진적이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역내 국가들과 함께 공동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추진하는 것을 이 구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참여 가능한 국가부터, 협력이 쉬운 분야부터, 참가국이 합의하는 속도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모색한다는 것이 이 구상의 취지이다. 아울러 이 구상은 북한을 비롯해 동남아 및 유럽 등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으며, 지역 내 모든 국가가 공동 설계자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참여국들이 각자의 관심 영역을 스스로 발굴하고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제시한 국가대전략이자 유라시아의 미래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만들어나가자는 협력 구상이다.¹⁰ 즉 유라시아 대륙의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을 통해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소통과 개방, 창조와 융합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의 동쪽 관문인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유라시아 협력을 가속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1) 하나의 대륙 구현을 위한 연계성 증진, 2) 창조의 대륙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3) 평화의 대륙을 위해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의 통로 구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3)의 경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출발점인 한반도에서의 신뢰 증진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바, 나진-하산 물류 사업 등을 통해 신뢰

10. 동 개념은 첫째, 유라시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하나의 대륙', 둘째, 유라시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의성을 배양하는 '창조의 대륙', 셋째, 유라시아 내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평화의 대륙'이라는 3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와 평화의 통로를 구축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러 정상은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및 신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러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기존의 양국 간 실질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진출 활성화 방안, 북극항로 활성화 및 항만 개발 협력, 청소년 교류 등 호혜적인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자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동 계기를 적극 활용, 우리 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러시아 측의 지지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같은 해 11월 푸틴 대통령은 주변 주요 4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표명하였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경제현대화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정상 간 정례적인 상호방문과 국제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안보 대화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양국 외교·안보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 간 및 외교부 간 정례대화 등 양국 간 관련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민간 교류 채널의 잠재력을 더욱 발굴하고자 하는 공동의 관심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사증면제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문화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서명을 환영하고, 상기 협정들의 조속한 발효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상호이해를 더욱 촉진하며, 양국 협력 전반의 효율적 추진을 크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¹¹ 아울러 양국

11. 사증 면제 협정은 2014년 1월부터 발효되어 양 국민은 60일간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관계 발전을 위해 청소년 간 교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면서, 양국 간 관광 교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2014년과 2015년 상호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이행은 인적교류의 활성화, 고용창출, 경제협력 발전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양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러 정상은 러시아연방의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을 환영하면서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연방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경제정책 시행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연방의 2025년까지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전략 및 기타 연방 특별프로그램 등에 따른 실현 가능하며 호혜적인 사업추진에 양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은행 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 및 한국투자공사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 간 ‘공동 투자 플랫폼’ 설립을 환영하면서 실현 가능하고 호혜적인 인프라, 농업, 산업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을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지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자 및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 등 다자 기반하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고 러시아연방 극동 지역에서의 항만·물류 시설의 개발 및 이용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러시아 철도공사의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시범사업인 나진(북한)-하산(러시아) 구간 철도 복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을 환영하면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유라시아의 협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여건의 조속한 조성, 특히 지역 안정 강화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이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 Korea Space Launch Vehicle) 및 ‘나로’ 우주발사기지의 지상인프라 공동 제작 관련 활발한 협력과, 2013년 1월 30일 발사체 KSLV-1의 성공적 발사 등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우주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다. 한편 양측은 한국의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가입에 따라 북극 개발·연구, 환경보존, 북극항로 운항 등에 있어 상호 협력에

대해 합의하였고, 쇄빙선(Ice breaker ship)·내빙선(Ice class ship)의 건조 및 운항 관련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이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2005년 9월 19일 자 공동성명의 목표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통하여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상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고, 러시아연방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신뢰 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신뢰 강화와 긴장완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역내 호혜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구축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러시아 측의 건설적 기여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하고,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러 양국 간에는 종래 철도, 가스관, 전력망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러 3각 협력사업 구상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2013년에는 동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즉 2013년 11월 정상회담 계기에 POSCO, 현대상선, KORAIL 등 우리 기업 3사와 러시아 철도공사 간에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나진항 개발, 나진-하산 간 철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러시아 철도공사가 북한 측과 합작형태로 진행해 온 사업으로, 우리 기업 3사는 상기 양해각서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4년 한·러 양국은 우리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정책과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시정책을 접목하여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 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공동 인식 아래 남·북·러 3각 협력사업 구상에 대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2014년 11월 개최된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국 관계의 안정된 발전에 대한 정상 차원의 상호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러 3각 협력 등 실질 협력사업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였다.

일반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어 양국 인적교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2014년 4월에는 한·러 대화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4개 분과 공동 국제회의, 한·러 대학총장포럼, 한·러 언론인 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연중 개최되면서 양국 간 제반 분야 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 아울러 2014년 7월 러시아 내 지한파 네트워크인 ‘러·한 소사이어터’가 러시아 법무부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정식 등록되었고 10월에는 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한·러 포럼을 개최하여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러 협력의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한 저변 확대와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한국어 교육 강화, 우리 문화에 대한 소개 및 보급 확대, 재러시아 동포에 대한 학술연구 지원 강화 등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한·러 양국은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정상외교, 국회의장 상호방문, 외교부 장관 회담 등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증진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였다. 특히 2015년 5월에는 세르게이 나리시킨(Sergey Naryshkin) 러시아 하원의장이 방한한 데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9월 수교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양국 의회 의장 간 연내 교차 방문이 이루어졌다. 정치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이 연중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7월에는 유라시아 연계성 증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일한 단절 고리인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의 중요성과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시범사업인 유라시아 친선 특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를 주제로 한 친선 특급 사업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국회의원, 재계 인사, 학계 인사, 언론인 등 각 계각층 인사 300여 명이 참가하여 19박 20일 동안 러시아, 중국, 몽골, 폴란드, 벨라루스, 독일 등 6개국 10개 도시를 거치며 정치, 경제, 문화, 학술 분야를 아우르는 30여 가지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8월 17일에는 우리나라의 최북단 철도역인 도라산역에서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지구 3분의 1에 달하는 1만 4,400km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였다. 친선특급 사업은 공공외교 측면에서도 한·러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을 통해 방문국과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한국의 멋과 매력을 발산하였다. 한편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은 양국 수교일(9.30)에 즈음하여 2015년 9월 마지막 주를 ‘한국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모스크바에서 한국 영화제, 퓨전 국악, 현대무용,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북극 및 북극항로 활용 관련 협력을 위해 2016년 6월 북극항로의 거점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무르만스크에서 ‘유라시아·북극항로 연계성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한·러 북극해 협력 세미나’는 북극권 내 최대 부동산인 무르만스크에서 최초로 개최된 한·러 양자간 북극개발 관련 국제 세미나로 1) 북극해 미 북극 항로 개발 관련 양국 간 협력 방안, 2) 북극항로를 활용한 연계성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북극항로 거점 도시들과의 상호이해와 문화교류 증진 차원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무르만스크에서는 한·러 합동 공연과 한국 영화의 밤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5. 신북방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 9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상호 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교역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달성해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라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며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극동 개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9개 다리(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전략 등 극동 개발과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신북방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와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 동북아 중심의 경제·외교 정책을 뛰어넘어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설정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가 있다.¹²

한·러 정상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rship)이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어 어려운 국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질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스관, 전력망, 철도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협의 채널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극동 지역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금융 이니셔티브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동북아 슈퍼그리드 비전 실현을 위한 초기 단계 조치로서 양국 관련 기관 간 한·러 전력망 사업 사전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에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한국”이라고 언급하며 극동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협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투자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러시아 측은 유리 트루트네프(Yury Trutnev) 러시아 부총리가 직접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도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극동 지역 주정부와 한국의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민간 차원에서도 한·

12. 신북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의 컨트롤 타워이자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2017년 9월 공식 출범하였다.

러 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하였다. 2017년에는 전문가 세미나, 언론인 세미나, 영화제, 대학생 대화,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등 양국의 산학, 민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이 연중 시행되었다. 또한 2017년 9월에는 6개 분과가 모두 참여하는 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양국 간 분야별 주요 현안을 평가하면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과 어젠다를 제시하였다.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으로 방문하였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구적 평화 및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했다.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잠재력의 보다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정신하에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2020년 양국 외교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차원을 포함, 한·러 간 정상급 정례 접촉을 활성화하고, 정부·의회·재계·학계·문화예술계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 제고를 위해 제반 분야에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성공적인 수교 30주년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국제 교역 장벽 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러 간 교역 자유화 조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기술 및 통신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응용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 창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관련 9개 다리(가스 산업, 철도, 항만 인프라,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 등 중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부처, 민간 기업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상기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사회경제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공동 투자자 플랫폼 활용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구체적인 유망 프로젝트 실현을 포함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 관심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력·가스·철도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유관 당국 및 기관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러 정상은 한반도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실현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동의 이해에 입각하여, 한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우호적인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나진-하산’ 철도 공동 활용 사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철도 사업에서 협력할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시베리아 대륙 횡단철도망과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분야와 관련 한국으로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매장지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 화석연료 에너지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의 에너지분야 상호 연계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파이프라인 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 공급 관련 공동연구와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동북아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 및 교통분야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포함한 호혜적 북극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택을 환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공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간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환영하고, 동 회담의 합의사항들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 관심 있는 대학생, 중소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공모전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으로 극동 지역과 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공모, 신북방 아카데미 교육 및 극동 지역 현지 탐방, 최종보고서 발표회로 이루어져 진행됐다.¹³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은 러시아 극동 지역과 협력하는 데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 실현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원)생,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향후 한·러 관계의 발전을 이끌 극동 전문가 양성에 기여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유라시아·극동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어업, 산업, 경제, 과학기술, 환경, 항공 등 분야별 정부 간 협의체도 활발하게 운영됐다. 제12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5.16,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에너지, 교통·물류, 수산, 지자체 간 협력, 통상·투자 증진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4.27) 결과 남·북·러 3각 협력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러 정상 간 통화(4.29)에서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한·러 유관기관 간 철도, 전력, 가스분야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1월에는 한국의 17개 지방정부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소속 9개 지방정부는 ‘한·러 지방협력포럼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함께하는 한·러,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제1차 지방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한·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자들은 양국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

13. 2018년 9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관광, 농업, 수산업, 보건, 교육·문화, 교통·물류, 환경·에너지 등 7개 공모 분야에 총 55개 팀, 134명이 응모했고 그 가운데 9개 팀, 25명이 서류심사 및 사업 아이디어 발표회를 거쳐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으로 선발됐다.

한 호혜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경제·통상, 항만, 물류, 관광, 의료, 교육, 과학, 인적·문화교류, 항만분야 등 포괄적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포항 선언’을 채택했다.

Ⅲ. 평가

1990년 이후 한·러 관계는 ‘정치·외교 관계의 정상화 추진기’(1988~1992), ‘우호 협력 관계의 확립기’(1992~1994),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 동반자 시대’(1994~2004), ‘상호 신뢰의 포괄적 동반자 시대’(2004~2008),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시대’(2008~현재) 등으로 발전해 왔다.¹⁴ 한·러 관계의 극적인 발전 경로와 관련하여 국내 러시아 전문가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¹⁵ 양국 관계가 지나친 기대에 입각한 ‘과열기’, 서로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급속한 ‘냉각기’, 소강상태의 ‘관리기’, 그리고 안정적인 ‘발전 모색기’를 거쳐 2008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추진 시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⁶ 또한 시기별로 나누어 국교 수립 및 관계 정상화 시기, 양국 관계 조정 시기, 소강상태 극복을 위한 관리시기, 새로운 동반자 관계 발전 시기,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추진 시기 등을 거쳐 온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¹⁷ 한편 같은 기간 양국 관계를 네 단계의 변증법적 진화과정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즉 수교 초기의 ‘희망과 기대의 시기’, 외교적 환상이 불신으로 환치된 ‘실망과 냉각의 시기’, 객관적 현실 인식을 반영한 ‘관계 조정기’, 상호 국익수렴 노력을 통한 ‘동반자적 협력기’로의 변화과정으로 보는 것이다.¹⁸

14. 고재남, “러시아 신정부와 협력강화 방안”,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과제. 2008년, 2쪽

15. 서동주, 장세호, “한·러 전략적 협력의 쟁점과 과제”, INSS 연구보고서 2019-12, 11쪽

16. 신범식, “한·러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 26권 1호(2010), p. 246.

17. 신범식, 하용출, 서동주, 성원용, 권원순, 김현택 외,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2015), p. 114.

18. 홍완석,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조건과 과제”, 슬라브연구 제31권 3호, 2015년, 64쪽

돌이켜 볼 때, 한·러 양국은 85여 년간의 외교 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지난 30년간 ‘협력과 갈등’, ‘접근과 정체’의 이중주를 경험하면서 냉전적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양국 관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은 협력 의제가 양자 차원에서 지역 및 세계 차원으로 다양화되고, 협력 범위도 경제·문화 영역에서 정치·경제·군사·안보분야 등 민감한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등 한·러 관계가 전면적 협력 관계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¹⁹ 한·러 관계가 현실적으로 동맹으로까지는 발전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은 최고의 관계 구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양국 내 한·러 관계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성격 규정은 아직까지 ‘수사(rhetoric)’에 불과하며, 양국 관계가 그 잠재력과 상호 보완성에 비추어 그 발전의 속도와 질적 수준의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는 지표와 방법은 관심과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분야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나아가 군사, 관광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국한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양국 정상 간 회담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지도자의 위상과 국가 체제를 고려할 때 러시아를 일방으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 정상회담은 여타국가의 경우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양국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양국 정상 간 만남은 그 자체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양국 간 정상이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 만남이 지속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답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양국이 상대적으

19. 고재남, “한·러 외교 관계 정상화 25주년의 평가와 과제”, “한·러수교 25주년:성과와 과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시리즈 16/24, 5쪽

로 짧은 기간에 동맹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단계의 관계 설정이라고 평가 받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합의를 이룬 데에는 정상회담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꾸준히 지속되어온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많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말의 잔치'로 끝나거나 신뢰에 금이 간 사례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 이후 한국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교차 방문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한·러 정상회담 개최 현황

방러	방한	제3국
1990.12. 노태우 대통령	1991.04. 고르바초프 대통령	1990.06. 한-소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1994.06. 김영삼 대통령	1992.11. 엘친 대통령	2000.09. UN 새천년총회 계기 정상회담
1999.05. 김대중 대통령	2001.02. 푸틴 대통령	2000.11. APEC 정상회의
2004.09. 노무현 대통령	2005.11. 푸틴 대통령 (부산 APEC 정상회의)	2001.10. APEC 정상회의
2005.05. 노무현 대통령 (전승 60주년 기념식)	2010.11. 메드베데프 대통령 (G20 정상회의)	2003.10. APEC 정상회의
2008.09. 이명박 대통령	2012.03. 메드베데프 대통령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006.11. APEC 정상회의
2010.09. 이명박 대통령 (야로슬라블 포럼 참석)	2013.11. 푸틴 대통령	2007.09. APEC 정상회의
2011.11. 이명박 대통령 (한러대화 폐막식)		2008.07. G8 계기 정상회담
2012.09. 이명박 대통령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2009.07. G8 계기 정상회담

방러	방한	제3국
2013.09. 박근혜 대통령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		2015.11. COP21 계기 정상회담
2016.09. 박근혜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2017.07. G20 계기 정상회담
2017.09. 문재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2019.06. G20 계기 정상회담
2018.06 문재인 대통령 (내외 국민)		
총 13회	총 7회	총 12회

한·러 관계 발전을 제한했던 요인을 분석해 보면 크게 ‘내재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재적 요인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양자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문제로서 먼저 양국 간 이익교환의 부조화에서 야기된 상호불신의 축적을 지적할 수 있다. 한·러 관계 형성 초기 모스크바는 친(親)평양정책에서 친(親)서울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보상 심리가 팽배했으나, 서울은 이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러시아가 친(親)남한 일변도(一邊倒) 노선으로 정책 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4자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함께 러시아를 배제했다. 또한, 모스크바가 희망하였던 북한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사업 참여 및 한국 무기 시장 진입도 좌절되었으며 대(對)러 투자 및 경제협력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느꼈다. 물론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익숙하였던 러시아로서는 우리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대(對)러 투자 및 경제협력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출하였는바, 이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이해 부족으로부터 기인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렇듯 한·러 관계 초기 국익교환의 불균형 심화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양국 간 불신을 증폭시키면서 밀월 협력

을 종식시켰다.

한편 한·러 양국 간 상대방에 대한 정책목표 우선순위의 ‘비대칭성’도 순조로운 관계 발전을 가로막았다. 즉 한국의 대(對)러 정책 목표가 주로 남북한의 제로섬(zero sum)적 대립에 따른 대북 전략적 우위 확보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러시아는 경제발전 우선 전략에 요구되는 한국의 경제력 유인, 이를테면 시급한 경제재건과 시장경제체제 착근 그리고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지원 확보와 경제협력 확대에 큰 비중을 둔 것이다.²⁰ 이 밖에 상호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반대칭성’, 경제협력 방식에서 시장주의적 접근과 국가주의적 접근의 충돌, 러시아에서 부패와 관료주의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의 미비, 한국 사회 일각에서 러시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냉전의 타력(惰力) 등도 한·러 관계 발전을 지체시킨 걸림돌로 작용했다.²¹

한편 구조적 요인은 양자 관계가 아니라 지정학적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는 외생적 요인인바 남북한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현실이 그것이다. 1996년 열린 집권 2기부터 러시아는 친(親)남한 일변도 노선이 초래한 기대이익 손실 만회 차원에서 남북한 분단의 현상(現狀)이 제공해주는 기회주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른바 남북한 등거리 노선으로 대(對)한반도 정책을 수정하였고 현재까지 그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푸틴 정권 출범 이후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자국에 유리한 이익균형과 세력균형을 창출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 왔는데,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포함하여 3차례에 걸친 러·북 정상회담, 대(對)북 경제지원 및 고위급 인사 교류의 확대, 2014년 110억 달러에 이르는 대(對)북 채권 탕감 등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긴장이 일상화된 남북 간 대치 속에서 러시아가 서울과 평양에 대해 취하고 있는 균형 노선은 한·러 간 전략적 관계의 심화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제약 요인이

20. 강원식,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일신사, 1999), 271쪽 재인용

21. 홍완석,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조건과 과제”, 슬라브연구 제31권 3호 (2015)와 홍완석, “한·러 전략적 관계 내실화를 위한 협력 비전”, “한·러 협력 2030 청사진”, “한·러 대화 총서 (20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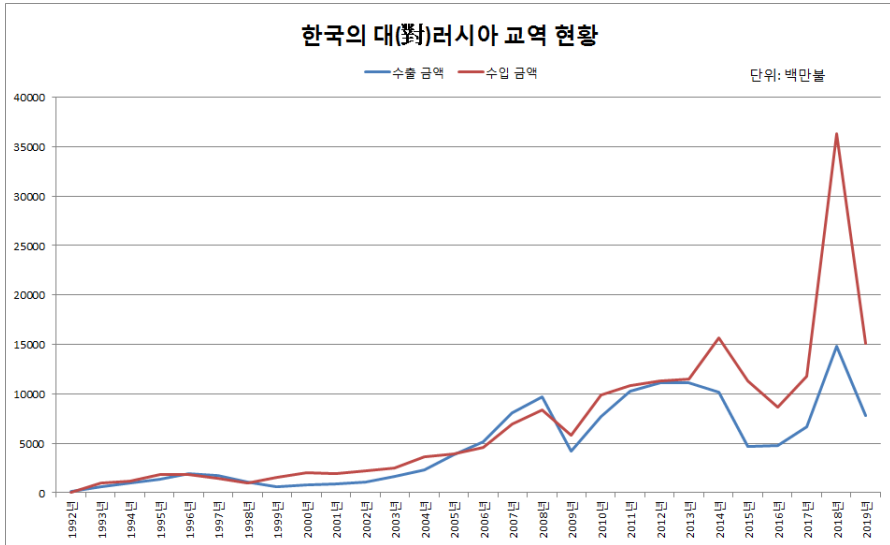
기도 하다. 같은 논리로 한국의 대(對)러 정책도 남북한 관계와 러·북 관계의 추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남북한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현실이 한·러 간 정상적인 관계 발전을 왜곡시켰고 오늘날까지도 한·러 관계의 동학(動學)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외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한국은 동맹관계인 미국과 전략적 관계인 러시아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미·러 삼각관계에서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이 한·러 전략적 관계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는 견해도 있다.²²

이러한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러 관계 정상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 사이의 교역과 투자 등 경제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관계 정상화 이후 수년 동안 수억 달러에서 90년대 중반까지도 연간 20~3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던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4년 258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다. 특히 2000년대 러시아가 고성장이면서 두 나라 사이의 교역 규모는 빠른 성장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1997년과 1998년 한국과 러시아의 디폴트(default) 선언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에는 교역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었고, 2014년 유가 하락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 경제가 위축되면서 한국의 대(對)러 수출은 2014년 9.1%, 2015년에는 53.7%나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對)러 수출은 2016년부터 다소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전년 대비 44.8%, 2018년에는 6%의 성장세를 구현하였다.²³

22. 홍완석 교수는 이를 '위계적인 한미동맹'이라 표현하였다.

23. KOTRA, 2020 국별 진출전략 러시아, KOTRA 자료 20-084, 20~21쪽; 엄구호, "문재인 정부 한·러 전략적 경제협력의 방향", 2017 한·러 정경포럼 발제문을 참조·재정리하였다.

〈그림 1〉 한국의 대(對)러시아 교역 현황



한편 관계 정상화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교역 품목도 점점 다양해졌으나, 한국이 러시아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재를 수출하고 러시아가 한국에 천연 자원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1990년대에는 컬러TV, 비디오카세트 레코더(VCR: Videocassette Recorder) 등 가전용 전자제품,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와 부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 수출이 주요 품목으로 등장하였다. 최근 러시아 경제가 위축되면서 그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액 중에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화물자동차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건설 중장비가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최근에는 승용차 및 차량부품 다음으로 합성수지, 건설 중장비 등의 수출 비중이 높고 화장품 수출이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2016~2019년 대(對)러시아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번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7월	
		수출 금액	수출 증감률	수출 금액	수출 증감률	수 출금액	수출 증감률	수출 금액	수출 증감률
	총계	4,769	1.8	6,907	44.8	7,321	6	4,663	8.4
1	승용차	925	1.5	1,380	49.2	2,070	49.9	1,475	21.5
2	자동차 부품	728	-13.2	1,061	45.8	1,090	2.7	740	13.1
3	합성수지	212	-12.0	253	18.8	312	23.3	185	2.5
4	건설 중장비	109	82.5	246	124.8	246	0.3	158	2.9
5	화장품	48	34.9	97	101.2	159	63.3	119	42.1
6	타이어	98	28.5	139	40.8	137	-1.7	95	-4.1
7	기타 플라스틱	72	22.6	114	56.5	133	8.4	82	0.0
8	아연도강판	90	-10.2	111	24	120	6.7	95	36.5
9	석유화학합 성원료	102	-19.1	112	24	77	222.5	33	-16.3
10	집적화로반 도체	36	20.4	72	97.9	66	35.7	32	1.6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MTI 4단위 기준

자료: KITA, KOTRA

반면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수출품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변함없이 원유와 나프타 등의 석유 제품과 천연가스, 유연탄, 무연탄 등 주로 에너지 자원에 집중되어 있다. 관계 정상화 이후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 구성에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1990년대 말부터 극동 지역에서 원유생산이 시작되면서 원유가 절대적인 1위의 품목으로 부상한 것이다.

〈표 3〉 2016~2019년 대(對)러시아 수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번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7월	
		수출 금액	수출 증감률	수출 금액	수출 증감률	수출 금액	수출 증감률	수출 금액	수출 증감률
	총계	8,641	-23.6	12,040	39.3	17,504	45.4	8,309	-15.3
1	원유	1,951	-44.2	2,918	49.6	5,850	100.5	2,797	-19.4
2	나프타	1,827	-12.8	2,354	28.9	3,549	50.8	1,583	-13.2
3	유연탄	1,433	0.9	2,256	57.5	2,878	27.6	1,414	-11.9
4	천연가스	582	-54.6	711	22.2	969	36.3	605	-0.4
5	무연탄	284	19.6	389	37.2	565	45.2	262	-23.7
6	계	204	-0.1	298	46	365	22.5	218	13.5
7	고철	228	3.5	299	31	336	12.1	148	-29.2
8	백금	49	-0.4	178	263.8	260	46	174	19.2
9	알루미늄괴 및스크랩	284	-27.4	178	263.8	331	-17.7	169	-27.7
10	명태	208	-2.2	200	-4	196	-2	69	-23.6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MTI 4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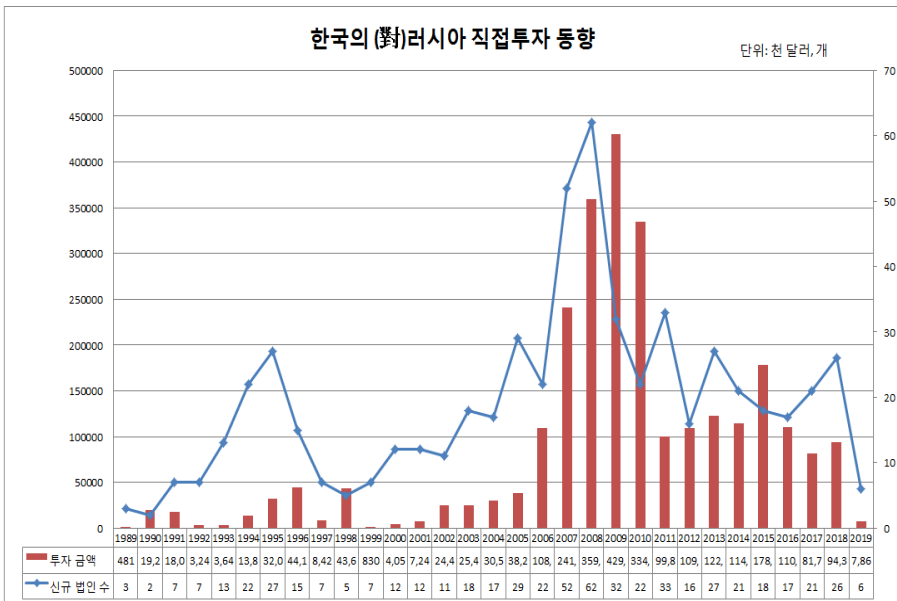
자료: KITA, KOTRA

한·러 양국 간 투자 교류 실적을 살펴보면 관계 정상화 초기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투자도 늘어났으나 한국은 아직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대상지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對)러시아 투자도 활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적

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대(對)러시아 한국투자 누계액은 약 27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6% 수준이며, 전체의 약 50%가 2007~2010년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對)러 직접투자가 초기에는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부터는 자원개발분야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었고 투자 건당 규모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시장 규모, 지리적인 입지, 생산요소의 부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여타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된다.²⁴

〈그림 2〉 한국의 대(對) 러시아 직접투자 동향



²⁴ 2018년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이 5,221만 달러로 전체 대(對)러시아 투자의 55.3%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4〉 우리기업의 러시아 투자진출 대표사례

회사명	분야	주요 동향
현대자동차	자동차	2016년 카멘카(상트페테르부르크 북서쪽) 지역 공장에서 크로스오버 1개 차종 생산 라인 추가
롯데호텔	호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중심가에 1.4억 달러 투자로 기존 건물을 개조해 5성급 롯데호텔 건설 완공
삼성물산	건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 위치한 유럽 최고 높이인 460m의 락타센터(Lakhta Center) 건설 프로젝트 CM(건설사업 관리) 수주, 설계 등 완료. 2018년 완공된 Lakhta Center의 중심부는 가스프롬 본사가 입주
오리온	식품	2007년 노보시비르스크 법인 진출 이후 2013년 생산라인을 증설한 바 있으며, 2016년에도 생산라인 추가 증설 중. 현재 러시아 중동부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대상	식품	2015년 6월, 노보시비르스크 인근 베르스크 지역에 위치한 시베리아 조미료분야 제조사인 V사와 현지 합작생산 추진 위해 대표사무소 개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	이르쿠츠크 공항 리모델링 및 복합 콤플렉스 건설 프로젝트 참여 위해 러시아기업 로스텍(Rostech), 로스네프트(Rosneft)사와 투자 컨소시엄 공동 참여 검토
CJ	식품	2017년 러시아 냉동식품 업체인 라비올리 지분 100%를 인수하며 4조원 규모의 러시아 냉동가공식품 시장에 본격 진출. 향후 2년간 13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러시아 전역으로 생산설비·영업망을 확대하고 핵심 기술과 설비, 전문인력 확보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

자료: KOTRA 2020 국별진출전략 26쪽

러시아는 21세기의 세계질서가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 세계 발전에 있어 경제, 사회, 환경, 안보, 보건 등 제반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나아가 미국과 서방의 세계 경제·정치를 지배하는 능력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구적 힘과 발전의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분산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세계질서의 구동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러시아는 21세기

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다국적 질서로 재편하여 러시아를 유라시아 역내의 중심축으로 만들고자 유라시아에서의 통합 노력을 가속하고 협력 증진을 내세우면서 이의 범위를 넓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러시아 정부는 전(全)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현대화(Modernization of Economy) 정책과 지역적 차원에서 극동·시베리아 개발이라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²⁵

소련 해체 직후 러시아는 1990년대 전반까지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우선시하였는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과 통합 노력에 주목하지 못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과의 양자 무역 및 투자 확대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APEC에 가입하는 등 점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나 경제 위기와 정치 불안 등 산적한 국내 문제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정치적 안정과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러시아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른바 신동방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 2기 푸틴 정부에서 메드베데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한편으로 극동의 천연자원 개발 수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동서 간 교통·물류 네트워크 활성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관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극동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²⁶

2012년 5월 3기 푸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더욱

25.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에 대해서는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25를 참조하기 바란다.

26. 1996년 수립된 연방 목적 프로그램 ‘극동 및 자바이칼(Zabaikal)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수차례 개정·연장했으며, 2009년에는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Baikal) 지역 사회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하였다.

구체화·가속화되었다. 푸틴 정부는 이른바 ‘유로-퍼시픽(Euro-Pacific)’ 개념에 기초하여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걸친 유라시아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쪽에서 추진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은 이들의 경제성장을 극동 개발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²⁷ 이러한 노력의 결과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은 꾸준히 발전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APEC 국가들과의 교역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²⁸

집권 4기를 맞이한 푸틴 대통령은 2019년 2월 20일 연례교서(The Annual Presidenti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를 발표하면서 극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2025년 BAM 철도(Baikal-Amur Mainline)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way)의 처리 능력이 1.5배 증가하여 2억 1,000만 톤에 달할 것이며 이는 시베리아와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러시아 극동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전국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는 등 극동 지역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강조하였다.²⁹

이러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금액 기준으로 한국은 극동러시아 교역의 24.9%를 차지하는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다.³⁰ 우리나라는 극동러시아 수출 비중의 27.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상대국이며, 극동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산물, 천연가스, 석탄, 석유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극동러시아 수입 비중의 15.4%를 점유하는 두 번째 수입상대국이며,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기계 장비, 전기기

27. 2012년 9월 개최된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가지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는데, 태평양 연안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신동방정책’의 상징이자 역내 경제협력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해당 지역의 교통 및 도시 환경 인프라, 발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4년간 총 6,794억 루블(약 213억 달러)을 투자하였다.

28.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대해서는 이재영,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과 협력 방향”, 2015 한·러 정경포럼을 참조·재정리하였다.

29. 서동주, “푸틴 대통령 2019년 연례교서(2.20)의 정책적 함의”, 이슈브리프 통권 10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3쪽

30. 극동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27.2%의 비중을 점유하였으며, 일본은 18.9%의 비중으로 한국 다음의 세 번째 교역국이다.

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식료품 및 농축산 가공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³¹

반면 러시아 극동 개발과 관련한 기업 진출 측면에서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³² 예를 들어, 2017년 말 기준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대한 출자 규모를 보면 일본은 약 623억 루블, 중국은 48억 루블인데 비해 한국은 약 19억 루블로 일본이 한국보다 약 33배 많다. 또한 극동 지역 '선도개발구역'에 대한 출자 규모도 중국 1,549억 루블, 일본 24억 루블, 한국 12억 루블 수준으로 중국은 한국보다 130배 많은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³³ 특히 일본의 대(對)러 협력 정책은 인프라 구축보다는 단기적 성과 도출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부터 일본 정부가 수행 중인 '대(對)러 협력 8개 분야'는 제4기 푸틴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목표 및 전략과제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Shinzo Abe) 총리는 푸틴 정부의 2024년까지의 전략적 과제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협력 계획의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하고, 일본은 특유의 기술과 지식을 살려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³⁴

한·러 관계는 구조적 측면에서 역내 주요국 간 세력관계와 전략 환경, 한반도 정세 및 양국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지향 등에 따라 다소간의 관계변화와 부침을 거듭하였으나, 정치·경제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1. 조영관, “한·러 물류 현황 및 협력 방안”, 이슈보고서 2018.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쪽

32. 김학기, “제4기 푸틴 러시아 정부의 전략과제와 한·러 협력”, KIET 산업경제, 2018.07, 61쪽

33. 선도개발구역은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사회경제발전 촉진 및 생활환경보장을 위한 편리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러시아연방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사업 및 여타 활동을 위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보유한 극동 지역 내 출입제한행정구역(군사기밀과 관련된 대량살상무기 및 군사 관련 기업들이 위치한 비공개행정구역)을 포함한 구역’이라고 정의된다.

34.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아베 총리 연설(2018.5.25)

IV. 한·러 협력 방안 및 전망

한·러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인접국이자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궁극적인 통일에 주요한 역할을 할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구도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간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러 간 정치분야 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러시아와 호혜적인 실질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므로써, 우리 국민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우리의 경제적 번영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기본적 입장은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근본적 토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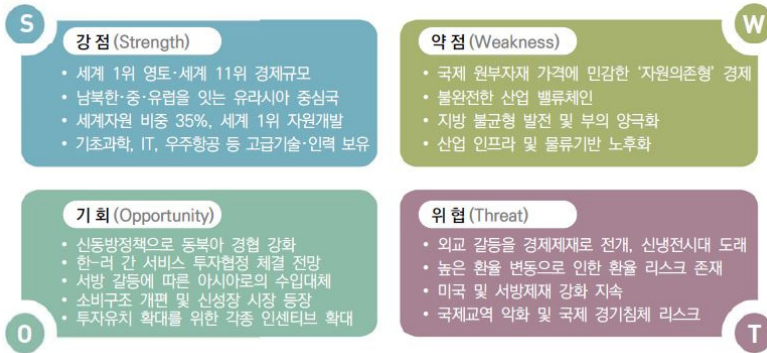
반면 러시아의 대(對)한 전략적 입장과 목표는 우리의 그것보다 다차원적이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전략을 구사하는 국가이고,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소련 시절 구성 공화국들로 구성된 CIS,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유럽 그리고 유일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한반도를 유라시아 지역의 한 축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첫째, 세력균형의 유라시아 연대망 구축, 둘째, 지경학적 협력과 투자 유인, 셋째, 포괄적 외교 수단으로서 에너지 자원 활용 전략을 구사해 왔다.³⁵ 특히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세계전략, 유라시아 전략, 동아시아, 동북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략 연장 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크림반도(Crimea) 병합 이후에는 서방의 대(對)러 제재 상황과 맞물려 푸틴 정부는 ‘실용적 新전방위 강대국 노선’의 대외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유럽·대서양 지역에 치우쳤던 외교적 관심을 자국 동부 영토에 인접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전환하는 러시아판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인 신동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5. 서동주, 장세호, “한·러 전략적 협력의 쟁점과 과제”, INSS 연구보고서 2019-12, 23~25쪽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대외정책 목표를 단순화하기는 쉽지 않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중·일과 공동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러시아는 역내 안보 현안의 당사자로서 소외·배제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는 측면에서 러시아 고유의 특성을 시현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문제를 세계 질서,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연장선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다른 축으로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북핵 문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평화체제 구축 등을 포함해 한반도 안보 현안의 당사자로서 상기 역내 현안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남북한 균형 접근, 등거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한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략을 구사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략적 중간자의 입장에서 남북 간 대립, 긴장을 우려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해서는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해 러시아의 존재감과 전략적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하는 것이다. 향후 러시아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남북한과 동시에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남북한 균형 접근과 등거리 정책을 변함없이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강조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러시아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간 최우선 정책 순위 대상국은 아닐지라도, 나름의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접근 대상이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인 관계 발전 도모가 필요하다.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뚜렷한 현안도 획기적 관계 향상을 가져올 뚜렷한 돌파구도 부재한 상태에서, 낭만적·이상적 협력 기대보다는 상호 전략적 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살펴보면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양국 간 실질적 경제 협력의 우선 추진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러시아 시장 SWOT 분석



출처: KOTRA 2020 국별진출전략, 29쪽

소위 '극동·바이칼 지역'은 러시아 영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너머 태평양에 이르는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동 지역은 전략적 불안정이 존재하는 동북아와 인접한 안보적 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 동북아의 지정학적 과정에 연루시키는 연결고리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인접한 저발전 지대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교통물류망의 요지이다.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강대국 지위를 강화하고 러시아 전체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영토 밖의 신성장 공간 조성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관련한 양국의 협력은 러시아와 한국 모두에 호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³⁶ 물론 현재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정책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현재와 같이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해외기술과 자본의 유치가

36. 제성훈, 민지영, 강부근, 세르게이 루코닌,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4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쪽

어려운 게 사실이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연방정부의 예산 여력이 소진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프라에 들어가는 지출의 효율성,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관리 회사의 활동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 등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반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정책 등 극동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통합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 작업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도개발구역이나 자유항 정책이 앞으로의 성패에 따라 이름이 변경될 수도 있고, 계획보다 조기에 종식되고 전략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극동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과 목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은 러시아 국내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미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러시아 극동과 주변 지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산업의 새로운 가치 사슬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³⁷

양국의 실질협력을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필요가 서로 부합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한국과 러시아는 산업보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를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 육성전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對)러시아 수출구조가 중간재 위주로 전환되고 있고 극동러시아 투자 동기 중에서 제조업분야가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 지역 내 한·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³⁸ 한·러 산업단지 조성은 한국에게는 러시아 내수시장을 포함한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산업거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러시아에게는 극동 지역 개발과 제조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양국의 니즈에 부합하는 실질적 협력분야라고 할 수 있다.

37. 김학기, 김석환, Korostelev D.A., “러시아의 극동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정책과 한·러 협력 방향”,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6-269, 52~67쪽

38. 산업단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통일된 정의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집적을 통한 제조업 및 생산 서비스 활동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단지에 대한 국제기구(UN 경제사회국공업개발센터)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을 계획적으로 집적시켜 이들에게 용지, 공장, 관련 기반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극동 지역 산업단지는 한국과 러시아의 중요한 산업협력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의 개방과 개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산업협력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가진다. 그뿐만 아니라, 한·러 양국은 과거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간 협의를 추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³⁹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으나 양국이 직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를 개진했다는 점은 앞으로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해외에서의 산업단지 조성 경험과 러시아의 중국과의 산업단지 조성사례 등도 중요한 협력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극동러시아 내 낮은 인구밀도와 산업기반 여건은 여전히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기업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외부요인으로 북한의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요소의 완화와 중·러 간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개발 합의에 따른 초국경 국제수송 노선의 개발 합의는 중·장기적으로 극동 지역을 포함한 환동해 물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체결에 따른 러시아 주도의 지역경제통합체제의 성장도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신흥소비시장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외부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와 제3자 제재, 그에 따른 루블화의 변동성도 한국과 러시아 산업 협력에 있어서 외부 위협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⁴¹

39. 한·러 양자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논의는 과거 1999년 나훗카 산업 특구 조성에 관한 협력사례가 있다. 당시 러시아 옐친 대통령의 '나훗카 자유경제지대에 관한 대통령령' 서명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의 논의는 양국 정부 간 협정(1999년 5월 28일)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부지, 기반시설 건설주체, 우대조건, 감독위원회 구성주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하원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성에 실패하였다.

40. 이현주, "극동러시아 한·러 산업협력의 잠재력과 협력방향: 한·러 산업단지 조성의 함의", 중소기업 제42권 제3호, 2018 가을, 288~313쪽

41. 대러제재에 대해서는 류혜정, "미국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와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이슈보고서 2018.12,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를 참조 바란다.

〈그림 4〉 극동러시아 한·러 산업협력의 SWOT

내 부 요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러간 산업보완관계의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구조에서 소비재 수출시장 뿐만 아니라 중간재 수출시장으로서의 러시아 시장의 중요성 증대 -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구조에서 1차 산품의 수입비중 지속적으로 확대 •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한러 양국간 협의 경험 및 각자 외국과의 실제 조성 경험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러간 나호트카 공업단지 설립 논의 - 한국, 중국,미얀마 등 국가와 산업단지 조성 - 러시아, 중국과 연해주 우수리스크 산업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인구밀도와 산업기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동지역의 낮은 인구비중(2011년 4.4%에서 2017년 4.2%로 감소) - 중국 동북 3성의 산업기반(하다치 공업벨트, 라오닝 연해경제벨트, 창지투 경제벨트)에 비해 부족 • 취약한 인프라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동러시아 물류수송, 통관 인프라 취약 - 동북아 주요 4개국 중에서 인프라 여건이 가장 취약한 수준 		
	S	W		
외 부 요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동해권 물류여건의 개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러간 국제수송노선(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개발합의에 따른 물류여건 개선 전망 - 최근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동북아 지정학적 불안 요인 완화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체결에 따른 역내 신흥 소비시장 확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으로 신흥경제통합체로 부상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러시아 기업과 개인 제재리스트, 특정품목(이중용도기술) 등 제재 및 제3자 제재 - 유럽연합, 특정품목(이중용도기술), 주요 금융기관, 에너지 기업 등 시장 접근 제한 등 - 루블화 환율 불안정성 		
	O	T		
협 력 방 향	적극적 협력	SO-WO	ST-WT	리스크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국경 국제수송인프라 개발 연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거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모리예2 노선의 자루비노항 인근 곡물 및 농식품 가공산업단지 조성 • 지속가능한 한러 산업보완관계 협력 모델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테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내 산업협력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사업수요 기반 산업협력 우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투자 사업 연관 프로젝트 참여 - 현지수요 반영한 소규모 사업 우선 추진 	

출처: 이현주, “극동러시아 한·러 산업협력의 잠재력과 협력방향: 한·러 산업단지 조성에서의 함의”, 중소기업 연구 제42권 제3호, 2018 가을, 307쪽

내부 강점과 약점을 외부 기회요인과 결합한 적극적인 협력과 내부 강점과 약점을 외부 위협요인과 결합한 리스크 최소화 협력 등의 다원화된 협력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현지 수요를 반영한 소규모 협력사업의 성공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구체적인 협력의 성과를 시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극동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러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 및 제도 개선책 등을 양국 정부에 꾸준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⁴² 왜냐하면 산업협력과 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호 간 ‘제도의 통합’ 및 ‘가치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공동연구는 단순히 학술적인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연구기관, 기업 및 각종 산업협회,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갖추어 진행해야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자원과 주변국의 기술 및 시장, 그리고 새로운 물류 루트의 출현은 분명 한반도와 중국 동북, 몽골 및 일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인구와 자본, 기술과 자원이 결합된 경제 공간을 창출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동 지역에서의 협력 구상은 어느 특정 국가나 양자간의 협력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벅찬 소위 메가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자적 협력을 통한 실행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후 냉전기 동 지역에서는 유럽연합과 같은 다자기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같은 다자동맹체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1970~80년대 유럽의 동서 양 진영이 추진했던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상호 신뢰 과정도 없었다. 특히, 현실주의적 안보구조 및 지정학적 역학이 뚜렷한 동북아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미·일·중·러 4국이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른바 ‘동북아 패러독스

42. 2014년 이후 기획재정부와 산업연구원, KOTRA가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의 여러 지방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산업·무역분야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은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확대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Northeast Asian paradox)'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역 협력 거버넌스 경험이 취약한 동 지역에서는 소(小)다자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다자주의적 접근은 한·러 양국 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민감성과 경제적 비대칭성을 자연스럽게 완화할 수 있으며 양자간 교류에서 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협력의 경험들이 축적됨으로써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제를 포함한 보다 큰 차원의 지역협력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은 헤징 전략과 지역주의 및 네트워크 전략의 조합적 성격을 가졌으며 정부에 따라 외교적 환경에 맞추어 그 혼합 비율만이 차이가 있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다자지역주의 전략을 추구해왔지만, 강대국 지지의 결여와 국내 합의의 부재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동북아를 아우르는 다자주의적 접근의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고 다차원적, 다원적 네트워킹 형성을 통한 소다자주의 추진을 한·러 협력의 새로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가장 처음 제시되었던 소다자주의 협력의 모델이 소위 '남·북·러 3각 협력'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을 3축으로 하여 가스, 철도, 전기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상이다. 가스, 철도, 전기 모두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을 묶어 '메가 프로젝트'라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의 경우 북한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대규모 자원 조달이라는 경제적 변수가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애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러시아, 북한 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게 된 이후에는 동 협력에 대해 3국 간 논의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러시아 측의 협력 유도, 통일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 확보, 유라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 북극해 시대 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한·러 양국 정상도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 추진 필요성과 사전 준비를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3각 협력사업 관련 내용을 한·러 공동선언에 명문화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한·러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9월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인프라, 에너지, 기타 분야에서 남·북·러 3각 협력프로젝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안은 한반도 정상화에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북·러 정부 간 경제협력 논의에서도 러시아 측은 남·북·러 협력사업 시행을 꾸준히 강조하였다. 남·북·러 3각 협력은 단순히 남·북·러 3국 간 연결고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 환경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이해가 연계되어 있고,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의 향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성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UN의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협력관계 추이,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남·북·러 협력 유망분야 발굴과 사전 조사 및 관련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⁴³

한편 최근 한·일·러 3국의 대외정책과 각국 지도자의 능동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소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3국 협력의 토대 구축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일본의 대(對)러 경제협력 정책의 접점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간에는 △대(對)러시아 교역의 규모, △각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교역의 추세, △교역 품목 및 △무역 결합도 등을 볼 때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은 대(對)러 경제협력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자로 상호 협력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일·러 3국의 상호 보완성이라는 측면과 에너지 협력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중첩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러 소다자주의 협력의 우선 분야로서 자원 에너지 공동개발 등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부터 생

43. 김학기, “러시아 극동 지역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추진”, i-kiet 산업경제이슈 제61호, 2~3쪽

산되는 에너지원의 같은 수요자 입장인 중국의 경제력 및 영향력 증대를 고려할 때 향후 가격 결정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처음부터 국가 간 협정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하의 지역협력을 추진하기보다는, 협력 여건이 갖추어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능한 분야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협력체제 간 중층적 네트워크 형성을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망된다.

1991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수행하여 1993년 접경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을 중심으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이 수립되었다. 1995년에 한국과 몽골이 참여하여 공식적 정부 간 기구로 출범하여 동북아 지역 최초의 정부 간 협력기구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국이 이 지역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중국은 자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동북진흥전략이 필요했으며, 동북아 지역 개발 거점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주도의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나 북한이 두만강 관련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두만강 개발 논의는 급감하여 소강상태를 지속하였다. UNDP가 주도한 두만강개발사업은 두만강 하구 일대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는 내부적 문제와 주변 환경의 문제로 인해 계획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이후 동 프로그램은 2005년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으로 전환되어 국제협력을 추진했다.⁴⁵ 두만강 유역을 둘러싼 소다자협력 프로젝트는 원래 UNDP의 구상과는 달리 북·중·러가 각기 거점들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그 경쟁성과 협력 가능성을 동시에 키우게 되었고, 이 과정

44. 이기태, 김수경, 나용우, 성기영, 김신규, “국경 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8-04, 2018, 127쪽

45. 2016년에는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추진했으나 회의 무산으로 연기되어 교통, 무역, 투자, 관광, 에너지, 환경 등 여섯 분야의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에서 북한의 대외 의존성의 균형화 정책은 이 사업들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작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변모시켰다.⁴⁶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러시아의 극동·자바이칼 경제 사회발전 프로그램 등과 연동하여, 해안지역 및 북·중·러 접경지역에 위치한 북한의 경제개발구와의 연계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인식에 대한 재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해 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러 일반 국민들 간 왕래는 2014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한해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도시로 불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방문객 수는 2017년 10만 명을 넘은 가운데 2018년에는 25만 명을 넘는 등 계속 확대 추세에 있다. 활발한 인적교류에 힘입어 러시아와 한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지식은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양국 국민에 대한 상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대중 의식 속에 투영된 한국의 이미지는 여전히 모호하긴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⁴⁷ 한국 국민과 러시아 국민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신뢰와 호감이 있는 관계’라고 답한 러시아 국민의 비율은 2016년 35%, 2017년 37%에서 2018년 43%로 높아졌다. 러시아인은 한국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주요 관심 분야로 한국의 신기술 도입을 꼽았으며, 그중에서도 의료(37%), 첨단 기술(35%), 무역(35%)을 가장 유망한 협력분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인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보는 입장이다. 양국 관계를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절반에 못 미치는 44%였으며, 양국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도 18%로 많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의 의식 속에 ‘러시아’의 이미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주로 소련을 많이 연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46. 신범식,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 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국제정치논총 53(3), 2013, 454쪽

47. 설문조사 내용은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 미래 협력 전망”,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한국리서치와 러시아 여론조사센터(프지음) 시행 결과를 참조 바란다.

앞서 언급한 한국과 러시아 국민의 양국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보는 시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인에게 중요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⁴⁸ 한국인에게 협력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매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⁴⁹

한편 한·러 양국 국민들은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한·러 관계를 선진국 대 선진국 관계로 보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러시아를 제3세계 수준으로 보고 선진국 대 제3세계국 관계로 응답하였다고 한다.⁵⁰ 양국 간 협력관계를 일관성 있게 지속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원동력은 양국 국민들의 폭 넓은 공감대와 지지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상호이해를 고취하기 위하여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더욱 적극적인 공공외교 전개가 추진되어야 한다.

48. 지난 3년간 56%에서 71%로 15%p 상승

49. 2016년 41%에서 2017년 38%로 하락

50. 박노벽, “대(對)러시아 외교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외교 제128호(2019.1), 49쪽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www.ifans.go.kr